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Member of MFA)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0-10

Tel: 02-312-1686~7 Fax: 02-312-1688 jcmk@jcmk.org <http://www.jcmk.org>

성명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6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밝히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와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시민사회의 이러한 우려가 분명한 근거가 있고 타당하기에 적극 지지하며, 동시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졸속적이고 반인권적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행정, 사법, 입법 그 어느 하나의 조직 속에 들어가지 않는 독립적 위상을 가진 기구들이 분명한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이나 선거관리 기능이 독립성을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 4의 국가업무 영역'이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의 기초가 된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원칙'(이른바 '파리원칙', 1993)은 모든 정치권력, 정치이념들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국가인권기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적 자치, 운영상의 자치를 통한 독립성 확보 및 재정적 자치 등을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수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기구로 인식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편입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을 떠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사형제 폐지 권고,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이라크 파병 반대 표명 등 정부정책에 대해 인권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인수위원회가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신있는 활동을 막고 정부정책의 거수기 노릇을 하면서 '인권' 간판을 단 생색내기용 부서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 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동시에 권위주의 정부 시대로 역행하려는 발상에 따른 것임에 분명하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위상과 활동은 국제사회에서도 모범적인 모델로 인정받아

왔기에, 이번 개편안이 가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루이스 아버 UN 인권고등판무관이 1월 18일자로 이경숙 인수위원장에게 강력한 항의와 경고 서한을 보내기까지 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측면에서도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상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피해가 비인간적인 정부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내 기구로 편입될 경우에는 이러한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기에 많은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대판 노예제도’로 지탄을 받아왔던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경우 법 규정도 없이 시행령에 의해서만 운영되어 왔으며 노동자권리 박탈, 송출비리 양산 등 숭한 인권피해와 부작용을 낳았던 바, 이는 행정부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였던 것이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수생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렇듯 정부정책의 오류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돌아볼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부처로 흡수될 경우 합리적인 권고 등 제대로 된 활동은 축소되고, 오히려 잘못된 정책을 묵인하는 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지금 현재에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각종 문제와 독소조항들이 행정부의 여러 제도와 정책들에 담겨있는 상황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권기구가 더욱 활발하게 문제를 파악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더욱 강력한 조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수위원회의 비이성적인 발상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논란을 지켜보며 이명박 차기 정부가 합리적인 인권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우리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훼손될 경우 이명박 정부를 ‘인권포기 정부’로 규정할 것이며,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규탄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동시에 차기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각별한 관심으로 지켜볼 것이며, 반인권적 정책을 시행할 경우 언제든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려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반인권적 발상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라!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이주아동, 동포, 난민 등 국내 거주 이주민에 대한 인권보장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2008년 1월 31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갈릴레아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 고양시외국인노동자살림의집,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목포이주외국인상담소,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양주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외국인노동자살림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아카데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의정부외국인노동자상담소,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상담소, 포천나눔의집, 포천스리랑카친구들, 푸른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부설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상담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